

내년 국가·현안예산 확보 최선

도, 지방재정협의회 참석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전라천년문화권 개발 등 예산심의관에 반영 건의

전북도가 2019년 국가예산 및 도정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2019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청취하고, 도정현안 및 2019년 국가예산 사업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기재부는 제2차관, 예산실장, 5개 심의관(총괄, 사회, 경제, 복지, 행정안전) 등 60여 명이 참석하고, 17개 시도에서 약

43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기재부에서 본격적인 국가예산 편성에 앞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전 지역현안 사업들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개최했다.

전북도는 2019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이번 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할 목적으로 김승일 행정부지사 및 실국장 8명 등(전체26명)이 총 출동하여 예산심의관별로 국가예산 사업 설명과 건의를 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다.

이번 협의회에서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지역 경제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사업과 아울러 대선 지역공약 100대 국정과제 등 지역 현안사업 총 37개 사업을 중점 건의

했다.

기재부 예산심의관별로 건의한 사업을 살펴보면, ▲인일환 예산총괄심의관에게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신규, 25억원),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플랫폼 구축(신규, 40억원), 노령산맥 원 휴양치유벨트조성(신규, 6억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신규, 40억원) 사업 등 ▲문성유 사회예산심의관에게는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신규, 5억원), 태권도 공연콘텐츠 제작(신규, 7억원),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시설 지중화 총사업비 변경(107억원→444억원),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축적소 신설(신규, 50억원) 사업 등 ▲안도걸 경제예산심의관에게는 전기상용차 자율(군집)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신규, 455억원), 새만금 SOC 구축(6개사업)(신규계속, 8,300억원), 고군산군도 내륙도로 건설(신규, 7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3개사업)(신규, 50억원), 장내유용 미생물은행 구축(신규, 15억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900억원)사업 ▲이상원 복지예산심의관에게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신규, 42억원),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신규, 3억원) 사업 ▲윤병태 행정안전예산심의관에게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신규, 69억원), 급경사지 붕괴우려지역 정비(신규, 32억원), 재해위험저수지정비(신규, 9억원) 설치사업 등을 집중 건의했다.

도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중앙부처 예산편성이 급주, 다음주가 절정시기로 판단하여, 중앙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제출 기일인 25일까지 국가예산 특별활동 기간으로 설정, 도정 역량을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국회 정상화 통한 정부 추경 조속 통과를” 9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국회 정상화를 통한 조속한 정부 추경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전북평생교육진흥원 농수산대학과 평생학습 진흥 위한 협약 체결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선기)은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과 9일 한국농수산대학 회의실에서 전라북도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자원을 상호공유하고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강사 등을 상호 지원하는 등 전라북도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자원의 상호공유 및 홍보 △평생교육 콘텐츠 공동 기획·개발 △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 등 상호지원 △기타 평생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의 협력 등 포괄적 업무 협력 등이다.

김선기 진흥원장은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은 농수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대학으로 특화된 농업분야 평생교육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농수산대학과 상호 협력하여 농업분야 평생교육을 특화하는 등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평생학습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온 동네를 달리는 선거버스 ‘뽕뽕’

전북도선관위, 유권자 소통 위해 운행 시작

유치원·초교 방문 선거공약 만들기 등 체험도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찾아가는 선거 홍보서비스 제공으로 유권자와 소통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선거버스운행을 시작했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가 고심 끝에 기획·제작한 선거버스는 내부에 선거체험관으로 조성하여 유권자를 찾아다니며 1인 7표 행사 및 사전투표제도 등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투·개표 체험, VR을 통한 선거역사전시관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선거버스는 5월 31일 까지 약 1개월동안 직장, 대학교, 군부대, 지역축제 등을 낚시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내 곳곳을 찾아다니며 대상자에게 맞는 맞춤형 선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9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2백여명의 아이들에게 민주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선거터투 새끼기, 선거공약 만들기, 선거퀴즈 풀기 등 다양한 체험을 벌였다.

특히 대형선거그림 그리기 체험을 통해 모두 다함께 참여하는 것

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아이들에게 뜻깊은 경험이 됐다.

선거버스를 체험한 한 유권자는 “선거버스가 있다는게 신기했고, 커피를 마시며 편안하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선거정보를 알게 되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선거버스와 더불어 5.19부터 선거일까지 원바디차량으로 주요 공원 및 광장 등을 찾아다니며 공연 등 선거로드쇼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동네방네 달리는 선거버스를 통해 유권자와 함께 소통·참여하여 행복한 우리 동네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보다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도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예비후보자 2명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B씨를 9일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는 2018년 3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OO대학교 출강교수”라는 허위사실이 게재

된 자신의 명함 1,202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가 있다.

도의원 예비후보자 B씨는 (현)농민회 감사, (현)한농연(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감사라는 허위사실이 게재된 자신의 명함 3,821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가 있으며, 특허를 21건 출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여건을 출원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위반된다.

전북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조직적 비방·후박산전 등의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고용위기 지원 추진 논의

도, 군산시·고용지청 등과 최정호 부지사 “퇴직근로자 생계 문제 소홀히 할 수 없어”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라북도가 고용위기 지원사업의 누수 없는 추진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9일, 군산을 방문해 군산시, 군산고용지청과 함께 군산고용위기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군산시청 회의실에서 이한수 군산고용지청장, 김형철 군산시 경제항만국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해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등 고용위기 지원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센터 설치장소인 군산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리모델링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정호 부지사는 전북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산공장 정상화이나, 이미 계약 만료된 비정규직 등 퇴직근로자의 고용·생계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퇴직자 종합서비스 제공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센터 운영에 있어 현장의 수요와 대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는 정부지원제도 전달에서부터 퇴직자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종합지원센터로, 고용부 승인을 거쳐 5월말 경 군산고용복지+센터 2층에 개소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